

민주 '윤석열 처가 리스크' 파상공세

“장모 바보” “부인 재산 출처 증명해야” 맹비난

분노만 있고 비전 없는 불안한 후보...지역정치권도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대권에 도전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가하는 등 윤 전 총장을 검증대에 올리며 맹비난했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아직 정치인으로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본격 검증에 통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될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의혹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부인의 회사에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장모 바보 윤석열의 텅 빈 출사표”라며 “딸 바보”는 종종 들어봤어도 “장모 바보”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언유착 의심 발언을 반복하는 윤석열 씨를 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장모 최순실’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입당 거취마저 불확실하지만 유일하게 (윤 전 총장의) 확실한 입장은 ‘장모 재판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문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분노와 과도한 비난만이 담겨 있을 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 해결 방법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국민은 불안한 후보로 느끼고 준비 부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 견제구를 날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후 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 등이 다 깨끗해야 된다”며 “부인의 소득 출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에 대해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움질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협력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기대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자신감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분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윤 전 총장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낮고, 검증이 계속될 수록 분절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호남에서 국민의 지지가 오르고,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민주당 차원에서 유심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합당, 더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안철수측 “여름 지나기 전에”

국민의당 이태구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시점과 관련, 여름철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밥을 굶고 먹어도 체하지만, 너무 시간 끌다 보면 밥때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비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합당이 마무리되고 야권 대권주자들도 열추정

리되면 7월이나 8월”이라며 “그때쯤 본인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야권 전체로 봤을 때 안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빠지면 일단 흥행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 행사장에서 안 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안 대표께 합당을 조금 더 전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군공항 이전 등 시·도의회 소통 발판 마련

제8대 하반기 광주시의회 평가

제8대 하반기 광주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 의정방향을 밝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은 30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24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238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19건, 동·송인안 84건 등 총 41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조례안 238건 중 61%인 146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한해 예산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며 면밀하게 살펴 심의·확정했다.

시의회는 또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9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233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655건의 시정사항을 발견,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회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시의원들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모 의원은 자신의 회사에 광주시 산하 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또 다른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최경석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다음 달 1일자로 전남선관위 상임위원(1급)에 최경석(56·사진)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최상임위원은 전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시선관위 관리과장, 광주시 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서동용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영양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화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해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업 중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 해상,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대학생들은 불편함을 넘어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강의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입학고사를 포함한 입학전형, 영상물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확실히 규정하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을 개정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사하는 김 총리-윤석열. 지난 30일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콘퍼런스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소통관에서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한 뒤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첫발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 ‘부인 소득출처’ 여권 공세에 “특별한 입장 없다”

이전 대변인 사퇴 “개인적 이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부인 김건희 씨의 소득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특별한 입장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나와 “2000만원 밖에 없던 검사가 어떻게 60억 이상의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며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출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캠프를 떠난 배경에 대해선 “개인적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가 양해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변인이 기자 시절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신상에 관한 주제”라며 “거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책 비전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에 “어제는 제가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생각과 포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어제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많은 훌륭한 분들과 한국의 현안을 잘 살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p>장성토지 (분양 매매)</p>	<p>상가매매 (상무지구)</p>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p> <p>★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p> <p>010-8660-9801</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p> <p>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p> <p>010-6670-9800</p>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